

##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Disaster Vulnerable Groups

-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y -

Ju Ho Lee<sup>+</sup>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Sehan University, Namsan-gil, Sinpyeong-myeon, Dangjin-si, Chungnam, Korea

### Abstrac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s reached over 2 millio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rapidly increasing as well. Multicultural families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disasters than average Korean families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cultural differences. For those who have low socioeconomic status, the risks associated with disasters become even greater. This high vulnerability indicates a lack of disaster safety and supporting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us, improving disaster safety management would be a long-term solution for challenges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that multicultural families have faced. Currently, Korean disaster safety and supporting syst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remain in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is article aims to emphasize the role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upon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on Japan, this article identifies the policy recommendations under the four themes.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disaster-vulnerable group,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safety supporting systems, disaster safety education

### 1. 서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재난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한국사회와 정부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고시 제2016-9호로 학교안전교육7대 표준안을 제시하고 유·초·중·고에서 참여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도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지도를 만들어 6단계 생애주기에 따른 재

난안전영역별 교육영역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KASEM)의 대상은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같은 시민으로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재난약자,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독립적인 자기방어가 어려운 취약계층(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교육 부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부재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로 특히 공교

<sup>+</sup> Corresponding author: Ju Ho Lee, Tel. +82-41-351-6151, Fax. +82-41-359-6100, e-mail. [leejuho@sehan.ac.kr](mailto:leejuho@sehan.ac.kr)

육과정을 통한 성장기 아동부터의 재난안전교육 필요성과 일반 성인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확산에 대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은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유불리에 따른 취약성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재난 상황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응급조치 및 대피명령 등 재난 대응 활동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등을 고려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적 정의조차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은 2012년부터 소방조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활동이 미비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원어민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생활안전 및 소방안전에 한정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2015.07.07.)를 보더라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의 인식은 뚜렷한 다문화 현상 속에 결혼 이주자 및 외국 출신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을 높이고 한국 생활에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다문화 가족과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실태를 고려한 재난안전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보다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의 현실을 종합·고찰함으로써 정책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논의를 통해 향후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수요를 고려한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II. 이론적 논의

### 1. 재난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용어는 재난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문적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적 개념에 대한 시도는 드물다.

재난취약계층 용어는 Sim, *et. al.*(2010), Kim, *et. al.*(2012), Kim, *et. al.*(2014)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는 물론 각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며, 대상적 측면에서 노인, 장애인, 외국인, 영유아 등을 포함한다(Kim, *et. al.*, 2014: 116).

국내의 연구로는 Yoo(2008: 9-11)의 경우 위험과 취약성 개념의 관계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신체적,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그 대상을 유형화하여 정의한 바 있다. 한편, Sim, *et. al.*(2010: 11)은 재난취약계층을 ① 경제적 측면에서 기본적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거나, ②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 측면에서 스스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③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Kim, *et. al.*(2012: 18)은 재난취약계층을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인자에 피해받기 쉽거나 그 피해로부터 스스로 복구행위를 하기 어려운 개인 및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Lee(2008)는 재난 약자란 용어를 통해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경우 위험관찰능력, 정보입수 및 발언능력, 행동능력 측면에서 일반인과 구분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Kim, *et. al.*, 2014: 116-117 수정 인용).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에 대비하여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여성, 아동 등을 포함한다. 즉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의 환

경적 특성과 개인의 역량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재난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은 재난 발생 시 첫째, 정보의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 둘째, 재난 상황에서 대피하기 위한 위험회피 능력의 곤란, 셋째,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외부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등에서 더욱 취약하다는 특성을 지니며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대부분 정보의 제한이나 자급자족이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그들이 활용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기존의 재난지원 방식(구두 발표, 방향 표지판 등)을 활용해 스스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그러나 인종의 다양성, 즉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방식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 채널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육은 이들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동체(community-based)를 중심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2.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재난안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결요건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태만한 경향이 있다(Son, *et. al.*, 2016: 144).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때때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다. 즉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적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Son, *et. al.*, 2016: 144).

재난 자체는 그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난 발생에 따른 위험은 질병처럼 예방이 가능한 문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교육은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Lee, *et. al.*, 2013). 이에 Gong & An(2009)은 안전교육을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재난안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Lee, 2016: 26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또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폐해로서 범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국제적십자연맹이 국제사회에서 지속해 온 재난관리 및 구호 활동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정보관리가 재난대응 및 구호에 있어 핵심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근래 들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재난안전정책의 일부로 포함하여 긴급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Kim, *et. al.*, 2015: 157), 재난안전교육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 3. 선행연구의 한계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교육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초점을 둔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행된 다문화가족 연구는 상당부분 여성 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차원의 정책연구가 대부분으로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재난안전 연구는 거의 없다(Kim, *et. al.*, 2015: 155).

한편,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Kwon(2012)

이 지진해일 대비 주민 교육훈련, Jeon & Lee(2013)가 산불방지, Lee, et. al.(2013)이 화재안전교육, Jeong, et. al.(2013)은 안전보건교육, Park & Kim(2014)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효과성을, Lee & Ryu(2014)가 중앙소방학교 재난안전교육훈련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실무자 또는 특정 재난 유형에 대한 교육훈련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연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연구들(Son, et. al., 2016, Lee, 2016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재난취약계층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Kim, et. al.(2015)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접근성에 대한 국내 연구 및 정책의 취약성을 인터뷰를 통해 실증하면서 이들 거주 외국인에 대해 민방위 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에 참여시킬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다.

선행연구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포괄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실무자 및 특정 계층에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정 계층의 경우도 학교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초·중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상 재난취약계층의 분류에 따른 체계적 정책방안 연구는 사실상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재난취약계층이 재난 발생 시 위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 갖는 어려움(disability)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의 사회적·정책적 배려 논의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재논의하는 한편,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지원체계와 재난안전교육

의 지원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한국의 다문화 가족 현황과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

#### 1.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현황

한국은 2015년 다문화가족이 80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매년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00만 명을 헤아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인 1,899,519명으로 이 가운데 장기체류의 비중은 1,467,873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214,168명으로 전체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작성하는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족은 305,446명으로 여성이 253,791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자녀는 207,693명으로 만 6세 이하가 117,877명(56.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이 98,037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 81,010명, 베트남 58,761명, 필리핀 17,353명, 일본 13,239명 순으로 높으며, 자녀의 경우는 베트남 57,856명, 중국 42,791명, 한국계 중국인 39,160명, 일본 17,19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의 경우 경기 89,877명, 서울 74,629명, 인천 19,397명, 경남 16,836명, 충남 14,019명, 경북 13,045명, 부산 11,720명, 전남 11,316명, 전북 10,291명이며, 자녀의 경우는 경기지역이 52,810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29,790명, 경남 15,498명, 전남 13,086명, 경북 12,712명, 충남 12,341명, 인천 12,334명, 전북 10,820명, 부산 9,142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2. 다문화 가족과 재난안전교육 실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은 2013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기초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www.mogef.go.kr).

제2차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6개 영역 86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7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5개),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6개),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16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1개), 정책추진체제 정비 분야(11개)로 재난안전지원 및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2012년부터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19생활안전 원어민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비상대비안내서 등을 간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재난안전교육을 사업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및 장애인을 고려한 119 다매체신고서비스가 40억의 정부 예산을 들여 2013년 6월부터 이용되고 있으나 그 이용률이 낮고 ‘골든타임’ 확보에 있어서도 추가정보 확보 등 신고접수 상의 시간 지연 등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앞서의 재난안전교육 및 비상대비매뉴얼만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재난대비지원 활동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www.mpss.go.kr).

## 3. 다문화가족 재난안전교육의 문제점

재난관리 정책, 특히 재난안전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은 이들이 갖는 언어적 장애와 문화적 차이에 있다. Kim, et. al.(2015)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있어 재난정보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 재난정보 전달체계 및 홍보방안은 미흡한 편이며, 교육훈련조차 외국인들이 훈련의 목적과 이해에 있어서 일반인(내국인)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위험인지는 물론 대처요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재난 피해 발생 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피해조사 기준이 불명확하며,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정책 편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반영이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가족 스스로가 국내의 재난지원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을 학습하고 활용하기 위한 수단 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은 이들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정착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다문화가족 정책의 차원에서 이들 가정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V.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과 재난안전교육 현황

### 1. 일본사회의 다문화 가족 현황

일본은 1980년대 말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 통계센터의 201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2003년 1,915,030명에서 2016년 6월 현재 2,765,267명(불법체류자 미포함)으로 증가하였다(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61643).

동 자료에 따르면 국적별로는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권이 240,584명으로 가장 많으며, 북미권은 121,327명으로 미국이 98,66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830,385명이며, 한국이 510,669명이며 태국 125,184명 순이며 무국적의 외국인이 640명으로 가장 적다. 즉 단일 국가들 중 절대적으로 많은 외국인이 중국과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307,828명, 여성이 1,457,439명으로 여성 외국인이 많으며, 0~5세 사이의 영유아는 전체 외국인 중 108,394명으로 중국 국적의 영유아

가 82,831명으로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190,285명으로 중국 국적이 190,285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은 164,995명으로 차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 2. 다문화공생 정책과 재난안전교육

### 1)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의의와 추진 내용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족의 개념과는 구분하여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이라는 공식적 정책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다문화주의’ 정책 또는 담론과는 구분된다. 즉 일본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공생은 외국 이주민과 일본 원주민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Choi, 2010: 144)<sup>1)</sup>한다는 점에서 결혼 또는 인지·귀화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형성한 주체만을 의미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는 다소 구분된다.

이러한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요한 추진은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야기현의 사례를 통해 주요한 정책추진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www.pref.miyagi.jp/uploaded/attachment/235842.pdf).

일본은 다문화공생 사회 형성을 위해 국적이나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국적이나 민족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시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하면서 실행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에 따른 다문화공생 정책을 위한 주요한 추진과제는 첫째, 내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 둘째,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과의 연계성 부족, 셋째, 의사소통의 어려움, 넷째, 학습기회의 부족, 다섯째, 가족지원의 필요성, 여섯째, 활동 장소의 부족, 일곱째, 외국인 주민의 현격한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공생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한 과제는 첫째, 인식의 벽 해소, 둘째, 언어의 벽 해소, 셋째, 생활의 벽 해소, 넷째,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의 시행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에 대한 기본이념의 계발
  - 주민에 대한 계발활동
  - 교육기관에서의 계발활동
  - 시정촌에 대한 계발활동
  - ‘다문화공생 가족’에 대한 계발활동 및 추진체제의 정비
-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
  - 지역주민과의 교류 추진
  - 방재훈련 참가 촉진
  - 방재·방법에 관한 보급 계발
- ③ 다언어화 지원
  -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다언어화 추진
  - 재해 시·긴급 시의 다언어 정보제공
  - 의료기관의 정보 다언어화 추진
  -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 다언어화 추진
  - 통역 활용 등에 의한 다언어 대응 추진
  - 지역 간 연계에 의한 다언어화 추진
- ④ 외국인 주민에 대한 학습지원
  - 일본어 강좌의 충실화
  - 외국인 아동·학생의 일본어 교육 추진
  - 생활 오리엔테이션 추진
- ⑤ 가족 지원
  - 다문화공생 가족에 대한 상담 대응의 향상
  - 상담체제 강화

1) 다만, 그럼에도 다문화공생의 개념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나 심지어 사회통합이나 국가적 팽창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Choi, 2010: 146). 한국의 경우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 통합을 넘어 국가적 팽창(가령, 저출산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언급되는 일부 사례)을 고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 외국인 주민의 육아 지원
- 모국어·모국문화교육의 학습지원

⑥ 활동 지원

- 취업 지원
-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 등으로 인재활용 추진
- 지역 활동 참가 촉진

⑦ 외국인 증가 대응

- 관계기관의 협동에 의한 지원·계발
- 다양한 외국인 주민에게 대응하는 환경 정비

일본은 지방정부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다문화공생 정책의 일환으로 상기의 7가지 사업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지원체계 및 교육훈련은 이런 시책의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다문화공생 추진 과정에서 재난안전 및 재난안전교육 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공생과 재난안전 지원 및 재난안전교육 지원정책 현황

일본은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대지진으로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의 힘든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재난안전교육에 보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Yang, 2012: 103). 특히 동일본대지진과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로 많은 외국인들의 출국러시 속에 다문화공생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Yang, 2012: 108-110).

무엇보다 Yang(2012)에 따르면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들이 모두 분산 거주하는 미야기현의 경우 외국인들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나

타났으며, 언어와 문화장벽은 외국인들이 동일본대지진을 겪는 과정에서 보여준 대표적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sup>2)</sup>.

2007년 일본 총무성 다문화공생의 증진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방재대책의 현상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www.soumu.go.jp). 지방정부의 재해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1990년 이후 급증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 재해에 대한 기본의식계발이나 재해정보의 정확한 전달, 대피소생활의 지원이나 안부정보 제공 등에 관한 대책이 부족한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재해정보의 전달, 대피소 등에 있어서 지원 안부의 확인과 정보제공, 그리고 방재학습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해대책의 충실·강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을 위한 중요한 방재대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차원의 논의에 기초한다(www.soumu.go.jp). 첫째, 재해 시 요원호자(재해약자)로서 외국인 주민이 갖는 언어, 문화, 구체적인 관습과 재해경험의 빈도 등의 차이가 재해 시 다른 요원호자와 갖는 차이로 외국인주민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들 스스로가 갖는 방재역량의 잠재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의 경우 외국인 주민을 단순히 재해 시 요원호자로서 고령자, 장애인, 유아, 임산부 등과 동렬의 위치에 두고 접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재해 시 다른 요원호자들과 구분되는 해결과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지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케이스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기초로 지역방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총무성 다문화공생의 증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www.soumu.go.jp).

2) 일본의 경우도 동일본 대지진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으며, 외국인 실태조사의 지원범위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통해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보다 거시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외국인 주민에 대한 기본적 관점의 재정립

재해 발생 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인명을 구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일본인 스스로도 외국인 주민의 방재에 관한 위기의식·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자조·공조·공조의 기본 아래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이 재난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시국은 다문화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한 축으로서 일상의 대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례 1: 일본 오즈미마치는 외국인의 일본 체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주민과 연계를 위해 피재지 지원·방재를 축으로 한 협동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 외국인 주민을 함께 생활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고 각각의 모국어로 일본의 관습이나, 제도, 매너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의 통역 등록사업’을 실시하여 동일본 대지진 시 브라질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의견을 스스로 모으고 활동 지원을 실시함

나. 관계자 그룹의 연계

지방정부 내에서 방재담당 부서와 외국인주민시책 담당 부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사전에 재해대책본부 내에서 외국인주민시책 담당 부서의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관기관 등의 지원활동, 대피소 등에서 외국인 주민의 요구사항 파악, 외국인 주민에 대한 유관기관의 분업이나 재해응급대책의 순서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원에 있어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국제화 협회 및 NPO 등 민간단체를 포함시켜 재해 발생 시 외국인을 서포트하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주민들 스스로가 형성한 조직 및 네트워크 그룹의 중요한 인물을 자주방재조직에 참여시킴으로써 외국인 주민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서 이들의 잠재적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2: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CLAIR)는 재해 시의 인적 상호지원 등을 위해 시정촌 단위의 협력네트워크를 광역단위 네트워크화하고 CLAIR가 연계지원, 후방 지원 하도록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모델을 수립하고, 센터를 통해 운영 가이드라인 및 피난소 등에 대한 지원 도구를 정비해나가고 있음

다. 재해정보의 전달

재해 발생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의 하나가 피해자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언어 장벽의 해소로 통상적인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평이한 일본어와 외국어 구사 능력만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외국인 주민의 국적에 따른 표현 능력, 문화나 습관의 차이를 근거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불충분성을 고려하여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다언어화나 통역을 확보하는 한편, 미디어와의 협력·연계 등 보다 전문화된 정보전달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스스로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례 3: 센다이 국제교류협회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센다이시 지역 내에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언어에 의한 정보발신과 전화 상담, 피난소 순회, 대사관 및 미디어 대응 활동을 실시하였음. 이 과정에서 정보의 제공은 인터넷, 라디오, 피난소 순회 중에 실시하였으며, 대학이나 NPO 등 단체의 원격지원을 통해 집중되는 다양한 번역자료를 분산·협력하여 부족한 언어 및 통역 사무를 처리함

라. 대피소 등에 있어서의 지원

대피소 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언어 장벽의 해소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화나 관습의 차이를 고려하여 상호간 문화·관습·종교적 차이 등에 대한 상

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별적인 조치를 위한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보다 대피소 운영 인력의 상담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례 4: 일본 나가오카시는 니가타 지진 당시 교혼을 살려 시와 사회복지협의회와 NPO의 3자 간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동일본 대지진 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NPO 법인을 배치해 백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가 단체를 서로 연계해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물자요청(가령, 기저귀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

마. 안부의 확인과 정보제공

일본 지역방재계획 상에서는 안부정보 등에 대해 종래 방송사업자나 경찰, 의료기관, 지방정부 등이 각각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재해 시 외국인의 안부 확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재해 시 피난한 주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등을 활용한 언어 장벽의 해소와 안부확인 시스템, 해외로의 재해 정보 전달을 구축해나가는 것을 주요한 시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방재학습

본 연구에서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방재학습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대상의 재해대응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스스로가 방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입국관리국이나 지방정부 외국인등록 창구, 숙박시설 및 학교 등을 연계한 방재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학습 제공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일본은 단지 행정정보만으로 외국인 주민의 재난대비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일본인 주민과 함께 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민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별도의 지역방재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주거지구나 외국인 학교 등에서 실천형의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방재훈련의 참가 촉진을 위한 연구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시즈오카현의 경우 외국인이 일하는 장소에서의 방재·방화교육을 실시 하거나 일부 NPO 단체 등이 아동을 대상으로 '카엣코'라고 불리는 물물교환 시스템을 통한 방재워크숍 등 지역의 외국인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3. 정책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다문화공생 정책의 추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총무성 연구보고회의 2007년 및 2012년 연구보고 결과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한 정책과제 및 일부 사례를 함께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는 다소 구분되나, 광의적 관점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특성상, 이에 따른 재난안전정책의 내용과 교육훈련 지원정책이 일본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그 내용적 특성은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한국사회의 흡수 또는 사회통합 등의 관점에 앞서 이들 다문화가족이 갖는 언어·문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관점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취약계층으로서 다문화가족이 갖는 특별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이를 반영한 재난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지원 정책 및 교육훈련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을 일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고령자,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다른 재난취약계층 그룹과의 중복적 위치에 처하는 외국인과 일반인과 역량의 차이가 없는 외국인(가령, 성인 남성 등)의 차별적 정책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재역량에 대한 고려는 정책개발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재난안전 관점에서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일본은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해다언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문화·관습·종교적 차이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연계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재난안전에 대한 독립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가 이들 센터와 연계해 소방안전 원어민 강사 양성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이를 보다 다양화·다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재난안전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이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 주거지구나 외국인 학교 등 외국인 주민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방재교육 및 훈련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다문화 가족과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가족 실태를 고려한 재난안전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 속에서 재난지원체계 및 재난안전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인과 달리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문화·관습·종교적 차이로 인해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재난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협에 처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지원체계의 정비와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연간 10% 내외로 증가하는 등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전체 국민의 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무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인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룰 수 없으며, 다문화가족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 대책의 정비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례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언어·문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써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다. 넷째, 재난안전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이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다문화 현상에 기초하여 특히

일본 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공생 정책과 재난안전지원체계 및 교육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도 세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인 것이다.

## References

- Asha, Hans. 2013. Disaster Risk Reduction and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2): 1-14.
- Choi, Byung Doo. 2010.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Communal Activity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in Japan: (2) Municipal Governance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Focusing on the Cases of Osaka and Hiroshima. *The Geographical Journal of Korea*. 44(2): 143-165.
-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08. *National Disaster Response; FEMA Should Take Action to Improve Capacity and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s*(GAO-08-369).
- Gong, Bae Wan and Hwang Kwon An. 2009. Actualities and Problems on the Safety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6(2): 279-298.
- Hoffman, S. 2008. Preparing for Disaster: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in Emergencies. *UC Davis L. Rev.* 42: 1491-1544.
- Jeon, Su Young and Si Young Lee. 2013. Study on the Awareness of Samcheok Local Residents on the Need for Forest Fire Prevention Education.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9(12): 159-178.
- Jeong, Won Il, Myung Sun Lee, and Yong Il Jeon. 2013. Compulsory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Industrial Accident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9(10): 149-164.
- Kim, Myung Gu, Gi Geun Yang, and Gi Sung Chung. 2014. 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aster-Safety Welfare of the Vulnerable Groups from Natural Disaster: Focused on the Aged Living in Imsil District, Jeollabuk-do.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9): 113-135.
- Kim, Youn Hee and Hyeon Suk Lyu. 2015. An Empirical Study on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Needs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3): 151-176.
- Kim, Youn Hee, So Yeong Jeong, and Yo Han Joo. 2012. *Developing Disaster Preparedness Contents Outreach Strategies for Disaster Vulnerable People*.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 Kwon, Gun Ju. 2012. A Study of Perception to the Tsunami Evacuation Exercise: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in Samcheok-si.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8(1): 23-38.
- Lee, Eun Ae. 2008. A Study on Constructing Directions for Vulnerable Groups Support Systems in Disaster. *Journal of Research for Disaster Prevention*. 10(4): 29-32.
- Lee, Ji Hye. 2016.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Safety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and Improvement of Teaching Safety in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7(2): 259-278.
- Lee, Ju Ho and Sang Il Ryu. 2014. Curriculums Issues to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Focused on AHP Analysis of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7): 99-118.
- Lee, Myung Sun, Song Yi Lee, and Sun Hye Kim. 2013. The Effect of Fire Safety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Safety Behavior: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9(11): 329-344.
- Park, Ji Hwan and Youn Hee Kim. 2016.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for Effectiveness of Disaster and Safety Training and Exercise in Local Government.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0(2): 45-62.
- Sim, Gi O, Sang Hyeon Park, and Sung Hee Jeong. 2010. *Research*

*and Analysi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Son, O Keun and Sung Min Im. 2016. Effect of Safety and Science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 on Safety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7(1): 143-166.

Yang, Kee Ho. 2012.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Japanese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Policy in Tohoku Region.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27: 99-118.

Yoo, Hyun Jung. 2008. A Study for Securing the Safety Right: Focused on the 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for Disadvantaged Clas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4(2): 1-15.

<http://int.sentia-sendai.jp/k/life/bousai.html>

<http://kostat.go.kr>

<http://kostat.go.kr/>

<http://tabunka.or.jp>

<http://www.city.nagoya.jp/kankobunkakoryu/cmsfiles/contents/0000034/34293/plangaiyou-ha.pdf>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dekigoto/event/2006/event\\_0612\\_1.html](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dekigoto/event/2006/event_0612_1.html)

<http://www.e-stat.go.jp/>

<http://www.ifie.or.jp/>

[http://www.ifie.or.jp/ifie-disaster/korean/bousai\\_guide2015.pdf](http://www.ifie.or.jp/ifie-disaster/korean/bousai_guide2015.pdf)

<http://www.jbk.jp.net/association/>

<http://www.liveinkorea.kr>

<http://www.liveinkorea.kr>

<http://www.mogef.go.kr>

<http://www.mpss.go.kr>

<http://www.soumu.go.jp>

<http://www.stat.go.jp/>

<http://www.topia.ne.jp/>

[https://www.spira.or.jp/wp-content/uploads/files/work/guide\\_korea.pdf3](https://www.spira.or.jp/wp-content/uploads/files/work/guide_korea.pdf3)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Asha Hans. 2013. Disaster Risk Reduction and Disability. *재활복지.* 17(2): 1-14.

공배완, 안황권. 2009.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논집.* 6(2): 279-298.

권건주. 2012. 지진해일 대비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1): 23-38.

김명구, 양기근, 정기성. 2014.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방향: 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13-135.

김윤희, 류현숙. 201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3): 151-176.

김윤희, 정소영, 주요한. 2012. 재난 취약자 대상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국립방재연구원.*

박지환, 김윤희. 201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분야 교육훈련 효과성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2): 45-62.

손오근, 임성민. 2016. 안전교육과 과학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이 특수교육 대상 중학생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143-166.

심기오, 박상현, 정성희. 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양기호. 2012.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다문화정책의 과제: 도후쿠형 다문화현상과 문제점. *비교일본학.* 27: 99-118.

유현정. 2008.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4(2): 1-15.

이명선, 이송이, 김선혜. 2013. 화재안전교육이 고등학생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9(11): 329-344.

이은애. 2008. 재난발생시 재해약자지원시스템 구축 방향: 일본시스템을 중심으로. *방재연구.* 10(4): 29-32.

이주호, 류상일. 2014. 재난관리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방향: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99-118.

이지혜. 2016. 초등학교 안전교육 현황과 사회과교육에서의 안전교육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 27(2): 259-278.

전수영, 이시영. 2013. 산불방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삼척지역 주민들의 인식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9(12): 159-178.  
정원일, 이명선, 전용일. 2013. 안전보건교육 의무화와 산업재해. 한국위기관리논집. 9(10): 149-164.  
최병두. 2010.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활동:

(2) 지역사회 다문화공생 거버넌스-오사카와 히로시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4(2): 143-165.

---

Received: Nov. 17, 2016 / Revised: Nov. 21, 2016 / Accepted: Nov. 22, 2016

##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개선방안

-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인과 달리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신체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상대적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언어·문화·관습·종교적 차이로 인해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재난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협에 처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지원체계의 정비와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사례를 통해 크게 네 가지 차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언어·문화·관습·종교 등의 특수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배려의 필요성, 둘째, 다문화가족 전체를 재난취약계층의 단일한 그룹으로 다루기보다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방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국민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특수성의 고려, 셋째,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성, 넷째, 재난안전교육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과 방법의 강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가족, 재난취약계층, 재난대비, 재난안전지원체계, 재난안전교육

---

Profiles **Ju Ho Lee** : He received his M.A. and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is a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re Service Administration at Sehan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16.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emergency management theory, budgetary theory, conflict manag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He has published 39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2 co-author books(leejuho@sehan.ac.kr).